

‘라·스 사태’ 공수처 기싸움으로 확산

〈리임·옵티머스〉

민주 “추천위원 시한 26일” 야권에 공수처법 개정 압박 국민의힘, 개정안 독자발의 수사대상, 부패 범죄 한정

국민의힘이 김종호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주원 전 민정수석을 운영위 국감 증인으로 요구하는 등 21대 국회 국정감사가 옵티머스-라임 사태 책임공방으로 치달으면서 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6일로 못박은 공수처법 추천위원 선임 시한이 지나면 즉시 공수처법 개정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20일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독소조항’을 뺀 공수처법 개정안을 독자 발의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26일까지 야당이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는다면 27일 바로 법사위 제1소위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법사위 제1소위원회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이는 ‘여야 교섭단체 2명씩 선임’을 ‘국회 추천 4명’으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전체 추천 절차 시한 등도 규정된 같은 당 백혜련·박병계 의원안도 발의된 상태다.

이 관계자는 “김 의원의 내용은 많은데 합리적인 부분이 있으면 취사선택해 대안을 만들 것”이라며 “다만 마치 (공수처법) 정권 후퇴법을 만드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자체적인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사 대상을 ‘부패 범죄’로 한정했다. 공수처가 ‘직무 관련 범죄’라는 포괄적인 수사 대상을 빌미로 편향적인 고위 공직자 사찰을 벌일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공수처 검사가 기소권을 갖지 못하도록 했다. 판사와 검사처럼 헌법적 근거가 없는 공수처 검사에게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위헌 소지가 있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방향과도 모순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그밖에 공수처의 범죄수사 강제 이집권과 재정신청권도 삭제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유상범 의

원은 보도자료에서 “대표적인 독소조항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추가 개정안을 발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사위원 등을 중심으로 16명이 참여한 이번 법안 발의는 사실상 당론 발의로 추진됐다.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법에서 치명적인 독소조항을 개정하고 공수처를 출범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맞불을 놓은 것에

는 ‘시간 끌기’로 의심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신동근 최고위원은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녁’에서 “특검은 국회 논의에 한 달, 준비하는 데 한 달 이상이 걸리며 빨라야 두세 달 뒤 수사를 하게 된다”면서 “그 때까지 간다는 것은 공수처에서 수사하게 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의 다른 관계자는 “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낸다고 하는데 그 자체는 높게 평가하며 개정을 같이 할 수도 있다”며 “다만 공수처 출범을 미루기 위한 꼼수라면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여의도 브리핑

민형배 “4대 공기업 채권, 이자가 원금의 281%”

4대 금융공기업이 보유한 채권 중 이자가 원금을 넘어선 채권이 129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이미 원금보다 이자가 많은 11만건의 채권이 상환되기도 했다. 포용적 금융정책과 맞지 않는 고금리 채권들을 금융공기업들이 적극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산울) 국회의원은 20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이자 원금을 넘은 채권 현황’ 자료를 보면, 2020년 8월말 기준 4대 공기업은 총 129만646건의 채권



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의 원금은 총 53조92억원, 이자는 149조 2551억원으로 원금 대비 이자가 281%에 달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금융공기업이 나서서 연체 이자율을 낮추고 장기채권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정리하고 최소한 이자가 원금의 100%를 초과하는 부분은 회수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병철 “공무원 범죄 82% 늘었는데 기소율은 1%”

지난 9년간 직무 관련 공무원 범죄는 82% 증가한 데 반해 기소율은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공무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은 20일 “법무부에서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공무원 범죄 건수는 1만9429건으로 2010년 1만667건에 비해 82%나 증가했지만 기소율은 7.0%에서 0.9%로 7분의 1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유형별로는 2018년 기준 1만5001건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한 ‘직권 남용’의 경우 기소율은 0.2%에 불과했으며 ‘허위공문서’는 1814건 중 기소율 2.9%, ‘독직폭행’ 876건 중 기소율

0.3%로 다른 범죄유형에서도 기소율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소병철 의원은 “도덕적으로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마땅한 공무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이렇게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신정훈 “나주 SRF 손실보전액 합리적 산출 필요”

나주 SRF 발전소 가동 여부 해결을 위해 꾸려진 민관협력 거버넌스의 협상이 과다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합리적인 손실보상금액에 근거한 손실금액 산출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국회의원은 20일 열린 한국지역난방공사 국정감사에서 “나주 SRF 민관협력 거버넌스의 기본합의서에 의한 해결방안이 마련되려면 결정적으로 손실보전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요구하고 있는 광주쓰레기로 인한 손실



금액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합의는 전남도와 해놓고 왜 광주쓰레기를 가져오는 것이고, 전남 쓰레기는 무상 공급

하는데 광주 쓰레기는 왜 돈을 주고 사오냐”며 묻고 “쓰레기 반입량을 보더라도 광주쓰레기 소각장이 할 수 있는데 광주쓰레기로 인한 손실금액은 당연히 제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삼석 “장기 방치 장애물, 항만안전 심각한 위협”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20일 “여수광양항만공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항만방치 장애물 처리현황’ 자료에 의하면 4대항만공사 모두 장기간 방치된 장애물 등으로 업무효율저하와 항만안전이 위협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폐기물 147톤이 2017년12월 반입되어 2020년 3월이 되어 서서야 반출완료 처리된 사례가 있고, 2018년에는 폐기물 4000톤이 9개월 동안이나 방치된 뒤 처리됐다. 쓰레기가 방치 되었어도 항만공사는 직접처리하지 못하



고 관리중인 광양만 권경제자유구역청 및 선사, 운송사 협조를 통해 반출 및 소각처리할 수밖에 없어, 절차가 진행중인 2017년에 반입된 폐기물

109톤은 3년 6개월째 방치된 상태다.

서삼석 의원은 “항만공사법개정을 통해 항만질서유지, 안전관리, 위법행위제재 등을 항만공사가 대행하거나 위탁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당, 공정3법 ‘3%룰’ 원안대로

재계 반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조항 유지... 다음달 초 심사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공정경제 3법’ 입법과 관련,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조항(3%룰)을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20일 “공정경제 3법의 큰 틀이 유지될 것”이라며 “3% 수치 등이 바뀌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 공정경제 3법 태스크포스(TF)도 21일 재계 의견 수렴 결과 등을 논의한 뒤 이 내용을 이낙연 대표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공정경제 3법은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제 개정안을 말한다.

3%룰을 비롯해 ▲다중대표소송제(자

회사 경영진에 대한 모회사 주주의 손해배상 소송 허용)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중대한 담합에 대한 검찰 고발 허용) ▲사익편취 규제 강화(‘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총수 일가 지분 20% 이상 상장사로 확대) 등이 골자다.

민주당이 재계 반발에도 3% 조항 등을 유지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은 일단 주요 국정과제인 공정경제 가치에서 후퇴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0대 국회 때 발의된 법안들보다 완화됐다는 평가를 받는 이번 법안을 수정할 경우 여권 내부나 시민사회, 학계로부터

개혁 의지를 비판받을 수도 있다.

앞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3% 조항 등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전제로 입법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무위 등 소관 상임위는 국감이 끝나고 다음 달 초 법안 심사에 착수한다. 심사 과정에서 주주권 행사 시 주식 의무 보유 기간을 두거나, 투기펀드가 이사회 진출을 시도하는 경우에 대비한 방어 장치를 별도로 마련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는 정도로 여야가 절충할 수도 있다. 다만 주요 쟁점에서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할 가능성, 여당 내에서도 3%룰에 공개 반대한 양향자 최고위원 등이 반발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오광록 기자 kroh@

“국민의 짐 발언 유감”

이재명-野 신경전 일단락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와 야당 의원들이 설전을 벌였다.

이 지사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국민의 짐 소속 국회의원과 보수언론이 ‘이재명이 홍보비를 남경필의 두 배를 썼다’, ‘지역화폐 기본소득 정책 홍보가 43%로 많다’며 홍보비 과다로 비난한다”면서 “음해 선동에 몰두하니 국민의힘이 아닌 국민의 짐으로 조롱받는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국감이 진행되는 동안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지사에게 줄곧 사과를 요구했고, 이에 이 지사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양측의 신경전은 일단 일단락 됐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손해보험협회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난처한 순간

정확한 과실비율 정보로 명쾌한 순간

과실비율에 대한 올바른 정보로 교통사고 처리가 명쾌해집니다

모바일 APP, 웹사이트, 전화 상담으로 과실비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과실비율



과실비율 인정기준 APP [구글플레이 & 앱스토어에서 검색]



accident.knia.or.kr [과실비율 정보 포털 접속 후 질문 & 사례집 제공]



02-3702-8500 [과실비율 ARS센터에서 전문 상담인력 상담]